

전주, 탄소소재 · 장비 국산화 ‘주력’

시-탄소융합기술원, 고강도 복합재용 보강재 상용화 기술지원사업 추진 2022년 완공 예정 탄소국가산단 통해 전문 70개 기업 집적화 등에 박차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촉발된 경제왜란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국가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탄소소재와 관련 장비 국산화에 집중하고 있다.

전주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방윤혁, 이하 기술원)은 총 4억2400만원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국산 부품소재 관련 장비를 자체 개발하기 위한 ‘고강도 탄소복합재용 보강재(열가소성 UD테이프 제조장비)상용화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고강도 탄소복합재 보강재인 탄소섬유 UD Tape를 개발해 탄소소재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제품 단가를 낮추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탄소섬유 UD Tape를 제조하는 국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와 기술원은 이 사업을 통해 국

산 탄소섬유 UD Tape 핵심요소기술 및 제조기술을 탄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수송기기, 농기계, 전기·전자 분야 탄소복합재 부품 고속생산 상용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탄소융합 복합품의 공정효율 개선 및 수입 대체품 자체개발로 제품의 단가를 낮춰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그동안 전라적으로 육성해온 탄소산업을 향후 첨단미래 사회의 핵심인 수소경제와 4차 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최근 탄소산업과 수소경제탄소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소산업팀을 신설했다.

신설된 수소산업팀은 수소(전기)차 보급 등 수소시범도시 선정과 함께 그간 육성해온 탄소와 수소를 융합한 새로운 사업 개발을 맡게 된다.

특히 시는 그간 전라적으로 육성해온 탄소산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인 수소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소재부품 및 장비의 국산화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국가 전략산업으로 추진 시 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인 전주탄소국가산단단지를 통해 탄소 전문 70개 기업 집적화 및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3년 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전신인 전주시계리사치센터를 설립해 탄소산업의 첫 물꼬를 틀 이래, △효성과의 기술협약(2008년) △전국 최초 탄소산업전담부서 설치(2010년) 등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해왔다.

또,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1991억 규모의 탄소밸리 조성사

업을 통해 탄소산업 전반에 걸친 기반 구축과 기술력 향상을 이끌어왔으며, 지난 2017년부터 진행 중인 탄소밸리 조성사업을 통해 탄소복합소재 실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 71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적박한 땅에서 시작된 전주의 탄소산업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전주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 잡고, 일본의 불합리한 경제보복에 대응할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탄소부품소재와 탄소기술 국산화에 힘써 전주경제가 국가경제를 이끌고, 시민들을 위한 더 많은 먹거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수 시장과 김양원 부시장,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등 시·간부공무원과 출연기관장들은 이번 경제왜란과 관련해 이날 초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정기적으로 기업 피해상황과 기업지원 방안 등 대책마련에 힘써오고 있다. /송효철 기자

‘글로벌 3위권 기업 될 것’

효성, 탄소섬유 공장 2만4000t 규모 확대... 신규 투자협약

일본 수출규제로 전라물자로 분류되는 탄소섬유의 안정적 공급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효성이 1조원을 투자, 탄소섬유 공장을 연산 총 2만 4000t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3위권 탄소섬유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효성은 20일 효성첨단소재 전주 탄소섬유 공장에서 탄소섬유 신규투자협약식을 열고 2028년까지 탄소섬유 산업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1개 라인, 연산 2000t인 생산 규모를 10개 라인 연산 2만4000t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성과 전라북도, 전주시 등 정부·지자체 간 ‘신규 증설 및 투자지원을 위한 투자협약식’ ▲산업통상자원부와 효성, 일진복합소재, KAI 등 탄소소재 관련 기업간 공동 테스트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얼라이언스 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공장이 완공되면 단일 기준 세계 최대 공장이 될 전망이다. 효성은 공장 증설을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10%의 탄소섬유 분야 글로벌 3위권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효성은 현재 1월 연산 2000t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을 완공하고, 2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현준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탄소섬유를 더욱 키워 ‘소재강국

대한민국’ 건설에 한축을 담당하고자 한다”며 “탄소섬유를 더욱 키워 ‘소재강국 대한민국’ 건설에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탄소섬유는 꿈의 소재”라며 “가벼우면서도 더 강한 탄소소재는 산업소재의 패러다임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지 그 끝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효성은 세계 최고의 소재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전주를 세계 최고의 탄소산업 메카로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수소경제도 탄소섬유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줬다”며 “강도면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효성 탄소섬유는 초고압인 수소가스를 저장하는 용도로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철을 대체하는 탄소섬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탄소섬유를 사용하는 후방산업의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며 “앞으로 많은 기업이 꿈과 용기를 가지고 전주에 모여 탄소 클러스터를 만들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더 창출해낼 것이며,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심축, 제조업 르네상스의 전진기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스1

원광대병원, 내원객 편의 도모 MRI 24시간 운영 확대

원광대학교병원은 20일 MRI기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했다.

원광대병원은 MRI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해 왔으나 지난 1일부터 운영을 확대했다.

MRI 운영 확대는 응급(외상)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환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됐다.

MRI 운영 확대로 휴일과 야간에도 이를 활용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원광대병원은 응급(외상)환자의 신속한 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료를 받는 내원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MRI 24시간 확대 운영을 위해 인력을 총인합으로써 신속한 진단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취약계층 위한 ‘한 끼 나눔’ 전주지역자활센터는 20일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센터 종사자와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국수를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대접했다.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 반대”

시민단체 등 구성 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 규탄 나서 원안위 “주제어설 CCTV 설치 확인 되면 재가동 허용할 것”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일부정 치권 등으로 구성된 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가 전북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담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한빛1호기 재가동 결정에 대해 반대에 나서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8월 9일 한빛 1호기 출력 급증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의결한 결과, 사고의 주된 원인을 관련법령과 절차서 위반,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 오류라고 발표했다.

원안위는 “인적 오류에 의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조성, 사업자의 운영기술 능력 혁신 유도, 규제기관의 대응체계 강화 등을 도출했다”며, “주제어설에 CCTV 설치만 확인이 되면 빠른 이날 안에 한빛 1호기 재가동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이번 원안위의 조사결과는 인근 주민이나 국민에게 어떤 설명회도 없었고 더욱이 민관합동대책위원회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발표했다”며, 민관합동대책위원회의 기술 전문가와 민관측 위원들은 기술적 건전성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빛 1호기 열출력급증사고의 시작점이었던 동적 제어부 제어는 시험의 세 차례 실패 원인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탈핵연대에 따르면, 한빛1호기는 가동중단 이후 9개월간의 점검을 마치고 재가동을 시작하기 위한 시험단계 중 하나인 동적 제어부 제어는 측정시험이 원안위 미상의 노이즈 간섭으로 인해 3회 실패했고, 14년 전 시행되었던 시험방법인 붕소희석법·

제어붕희석법으로 바꾸어 시험하는 과정에서 열출력 급증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탈핵연대는 “한빛 1호기 열출력 사고의 주요 원인을 원안위는 인적오류로 규정하며 이들의 위법 사항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정말 중요한 기술적 결함이나 임계초과에 대한 원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수동정지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에 대한 분석을 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탈핵연대는 “CCTV 설치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위과에 초점을 둔 것이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원안위의 한빛1호기 재가동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빛1호기 사용정지 이후 절차에 따라 사고조사를 마쳤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재가동 사용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이다. /송효철 기자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불시 시행

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주완전경찰서와 협업으로 전주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 273건(사망 21명, 부상 312명), 2017년 317건(사망18명, 부상 369명), 2018년 322건(사망 26명, 부상 372명)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일환으로 공단은 19일 야간시간대에 전주시 신시가지 일원에서 스카이라이프식 단속이란 30~40분 단속 후 장소 이동 후 재차 단속하는 방식이다.

공단 한상운 본부장은 “이륜차 특성상 안전장치가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명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하는 한편, 교통안전교육 및 계도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 여인숙 화재로 숨진 노인 3명 신원 확인

지난 19일 전주의 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3명의 희생자들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20일 전주 완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에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김모(83·여)씨와 태모(76)씨, 손모(72·여)씨로 밝혀졌다. 전날 김씨와 태씨의 신원은 확인됐

으나 나머지 1명에 대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여성시신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밝히려 했지만,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쪽지문과 주민 진술, 전입 기록 등을 토대로 숨진 여성이 손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자들은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 등에 내다 팔며 매달 12만원 정도를 내고 2평(6.6㎡) 남짓한 사실상 ‘쪽방’과 마찬가지로 여인숙에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면서 “사망자 유족과 모두 연락이 닿아 추후 일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공원 · 녹지 설치 정자 전수조사

완산구, 23일까지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라기)가 공원 및 하천, 녹지 등에 설치된 정자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완산구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정자 시설물(정자 35개, 퍼즐러 176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지난 11일 발생한 경관독지 내 정자 붕괴와 같은 동일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설치 개선방안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물 파손여부 △목조시설물 부식여부 △구조물 탈락 및 시설물 기울어짐 등으로, 구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해온 정자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과 안전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정자 시설물의 노후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긴급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는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수하기로 했다.

특히 한옥식 정자의 경우 추춧돌 위에 기둥을 올려놓는 형태로 시공되는 만큼 돌풍 및 태풍 등에 대비해 안전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신규설치 시에도 보수·보강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라기 완산구청장은 “공원 · 하천 · 녹지 지역 내 정자에 대한 유지관리대책을 마련해 관련 시설물 이용자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긴급 실태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처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용 중 불편함을 느끼거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즉시 담당부서인 구청 생태공원녹지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 슬로시티 홍보교육

전주시는 20일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전주대학교 교수로부터 ‘슬로라이프의 이론편과 실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청취하면서 슬로시티의 철학을 배웠다.

참석자들은 이선미 소비자정보센터 팀장이 진행한 한옥마을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한옥마을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도 했다.

교육 일정 이후에는 주민들이 준비한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강의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송효철 기자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각 기관별 현황 및 주요사업을 공유한 후 최옥채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주제로 한 강연을 청취했다. 또, 함윤주 KBS 아나운서의 ‘복지의 지름길, 소통’을 주제로 한 강의와 김승수 전주시장의 전주시 복지정책에 대한 특강도 이어졌다.

전주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노인복지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복지체감도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